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0

2020창원조각비엔날레

시민 강좌 <조각의 모든 것>

윤태건 더 톤 대표 : 공공미술과 국내조각

2020. 6. 27 (6회차)

국내 공공미술의 전환과 확장

공공미술은 공공과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서구 공공미술의 역사는 공공과 미술, 공공성과 예술성을 대하는 입장과 태도에 따른 논쟁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늦지만 국내 공공미술을 바라보는 시각과도 맥이 통한다. 입장의 차이만큼이나 모호한 공공미술은 그래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넓고, 느슨하게 정의하면 공공미술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미술작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문화환경과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한”이라는 다분히 ‘공익’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대체로 무난하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미술의 개념을 다분히 장소적 특성, 즉 예술적 행위가 ‘공공의 장소’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환원시킴으로써 공공미술의 범위를 애매하고 무한정하게 확장시킨다. 하지만 장소(공공의 장소)와 더불어 재원(공공의 기금), 관객(공중의 감상, 참여, 주도), 내용과 목표(공공적 맥락과 시민참여 지향) 등에서 얼마나 공공성을 갖는가에 따라 다양한 논쟁이 가능해진다.

1. 제도로서의 공공미술 : 건축미술작품제도

제도로서의 공공미술인 ‘건축미술작품제도’는 공공미술의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서 많은 곳에서 인용되고 있는 건축 속의 미술(Art in Architecture)-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Places)-도시 계획 속의 미술(Art in Urban Design)-뉴장르 공공미술(New Genre Public Art)처럼 도식적으로 구분했을 경우 ‘건축 속의 미술’에 국한된다.

미술작품제도는 1995년 의무화 이후 2000년대에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점차 다양성의 길을 걷고 있다. 제도 시행의 초기에는 플롭아트와 모더니즘 조각이 주류를 이루고, 유명 작가의 작품이나 특정 작가의 독식 현상이 심했으나 점차 장소특정적인 작품과 재료와 형식의 다양화,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제도상 ‘장식’이라는 한계와 ‘유지가능한 또는 (반) 영구적인 오브제’라는 한계를 가짐으로써 공공미술의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담아내기에 불충분한 면이 많다. 이와 함께 각종 비리 등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질적 수준 저하 같은 고질적인 병폐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2. ‘조각의 야적장’이라는 비판과 새로운 방향 : 조각공원

조각공원은 한정된 장소를 예술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계획 아래 조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공적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각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폭이 넓다. 따라서 ‘장소속의 미술’이나 ‘장소로서의 미술’이란 특징이 두드러진다. 현재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100여개가 넘는 조각공원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사업으로 특정 주제나 테마(포천석 생산지임을 테마로 한 포천조각공원 등)를 갖거나 심포지엄 형태로 조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간에서는 기업이나 미술관의 소장품(오크밸리 조각공원, 모란미술관 조각공원, 장흥아트파크 등) 또는 개인작가의 작품을 모아 놓는 형태(베미꾸미 조각공원 등)로 조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조각공원은 1980년대 초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해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감소된다. 이것은 기존의 조각공원의 문제점, 즉 개방된 공공장소에 오브제를 (모아)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한 회의이자, 조각공원의 조성이 지자체의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이나 국책사업의 부대행사(올림픽조각공원, 도자기엑스포조각공원 등)로 전락하면서 ‘조각의 야적장’(최태만)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각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조성한 조각공원의 차이점과 장소성, 역사성을 구별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같은 연유로 현재는 조각공원(류)을 조성하더라도 ‘일회성 심포지엄’이라는 판에 박힌 형식 보다는 장기적 계획으로 조성하거나 전시형태와 결합(창원조각비엔날레)하거나,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건축, 조경, 디자인과 협업(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하는 등 이전에 비해 장소성과 차별성을 도모하는 형태로 진화하는 중이다.

3. 관심과 논란 : 해외 작가의 공공미술

각종 설문 조사에서 국내 공공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종종 선정되곤 하는 조나단 보롭스키 Jonathan Borofsky의 해머링 맨Hammering Man(2002, 신문로 흥국생명사옥)은 기업의 컬렉션이다 이미지 제고 목적으로 설치된 전형적인 플롭아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과도한 호평을 받고 있다. 반면 보롭스키와 함께 국제 공공미술의 대표 작가인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의 스프링은 공공미술이 지향하는, 그리고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인 장소성, 역사성을 반영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와 시민들의 참여와 공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에 실패함으로써 온갖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자, 논란의 중심이 돼버렸다. 그래도 버리고 싶은 공공미술 1위에 뽑혔다는 것은 조금은 과도한 악평을 받은 것 같다.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해외작가의 공공미술은 앞에서 본 것처럼 기업의 컬렉션 또는 아트마케팅 차원에서 미술장식제도와 별도로 구입, 설치된다. 또 다른 경로는 조각심포지엄이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부산비엔날레 등 심포지엄이나 전시 형태를 빌어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작가의 공공미술을 만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수량 대비 금액과 규모, 특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다.

4. 피하고 싶은, 그러나 끈질긴… :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대부분 지자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징조형물은 지자체 이미지와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지거나 혹은 대형사업이나 공간을 상징,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다. 일반적으로 우스꽝스럽게 캐릭터화되거나 규모의 거대함과 수직적 형태로 나타난다.

전자는 공공미술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다. 예산을 쥐고 있는 관료집단의 홍보에 대한 단순하고, 과도한 욕심이 빛어낸 이같은 결과물은 지자체에 지천으로 깔려 있다. 남양주의 ‘먹골배상징조형물’, 익산의 ‘익산보석상징조형물’, 횡성의 ‘횡성한우조형물’, 강릉의 ‘홍길동조형물’, 괴산의 ‘괴산고추조형물’ 등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고, 의외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양산되거나 시도되고 있다.

캐릭터조형물처럼 최악은 아니지만 각종 상징, 기념조형물도 고루하기는 마찬가지다. 이것은 일차원적으로 규모의 거대함과 수직적 구조로서 남근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조형적 언어로 ‘뭔가’를 기념

하고 상징한다는 것에 대한 ‘강박’은 창작자나 수용자 모두에게 피곤한 일이다. 예술적 상상력의 빈곤함과 공무원의 비전문적 개입(유도)은 상징, 기념조형물을 여전히 ‘공식의 늄’과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만든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쟁기념관의 ‘한국전쟁50주년기념조형물’, 인천공항의 ‘인천공항상징조형물’, 태백의 ‘스포츠상징조형물’ 등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5. 도시시설물로의 확장 : 도시계획 속의 공공미술

공공미술의 스펙트럼이 도시시설물과 만나면서 다채로워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리노베이션 공사장 가림막으로 등장한 마그리뜨의 ‘골콘다’와 광화문 복원 공사장의 양주혜, 강익중의 ‘광화에 뜬 달’ 등 가림막은 이미 공공미술의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를 굳혔다. 건축미술작품 심의와 관계없이 시설물에 미술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존 건축미술작품이 벤취나 가로등, 문주, 팬스, 이정표, 에어덕트 등 기능적인 요소를 갖추는 형태로 진화하는 경우도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서울역사 앞에 설치된 박기원의 ‘자’는 노숙인이 누워 자는 것을 우려한 철도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앉거나’, ‘눕는 것’을 배려한 건축미술작품이다. 그밖에도 더시티7의 벤취(이웅배), 현대아이파크의 문주(신치현) 등 심의를 통과하고 설치된 공공미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했던 ‘놀이터프로젝트’나 인천문화재단의 ‘교문바꾸기’, 경기미술관의 컨테이너로 만든 ‘공공도서관’, 도시갤러리프로젝트의 각종 벤취, 셀터 등은 공공미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심지어 하나은행 사옥처럼 건축물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공공미술품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

6. 도전인가? 기회인가? : 도시계획 속의 공공미술 VS 공공디자인

앞에서 도시시설물로 확장하는 공공미술은 필연적으로 공공디자인과 만나게 된다.

이 지점에서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리고 “도대체 공공미술이 무엇인가?”라는 우문을 다시하게 된다. 미술가가 만들었으면 공공미술이고, 디자이너가 만들었으면 공공디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공공미술 보다 한참 늦었지만 한때 국내에서는 비교도 안될 만큼 위용을 떨쳤던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은 “최근 한국에서 등장한 신조어로 위키피디아에서도 그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공공디자인은 도시라는 큰 스케일에서부터 우표, 주민등록증, 심지어 관공서 문서서식까지 편입하고 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명쾌할 수도 있다. 여기서 디자인이란 ‘디자인’이라는 장르 개념이라기보다 ‘디자인하다’라는 행위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술을 포함한 건축, 조경 등 모든 영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는 이같은 딜레마를 공공미술 대신 공공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슬쩍 비켜선다. 2005년(이영철), 2008년(김성원)에 이어 3회째인 APAP 총감독은 아예 건축가(박경)가 맡기도 했다. APAP는 기존의 조각심포지엄류의 형태에서 진일보하여 미술은 물론 건축, 디자인, 조경을 아우르는 공공미술프로젝트로 도시계획 속의 공공미술의 진일보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서 10년전에 선보였던 공공미술을 안양에 ‘재탕’하는 등 사실상 장소특정성이 실종된 명품위주, 해외작가위주로 흐르는 점은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7. 누가 김할머니를 치었나? : 민간의 뉴장르 공공미술

2009년 추계예술대학교 개교 35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공공미술프로젝트 <골목에서 ‘주름’잡기>는 아카데미 강단의 새로운 실험이다. 추계예대가 자리한 북아현동은 뉴타운 건설로 철거를 눈앞에 둔 ‘주름진’ 곳이었다. 이 장소를 대상으로 학교의 지원 아래, 미술학부 교강사, 외부전문가, 다수의 학부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뉴장르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것은 공공미술에 대한 높은 관심이 대학교육과 결합된 형태로까지 발전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프로젝트다.

2000년대부터 본격화된 뉴장르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은 기존 건축미술작품 중심에 대한 반성이자 반작용의 결과다. 특히 젊은 기획자(집단)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이들은 90년대 초부터 공공미술의 사회적 기능과 뉴장르공공미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공공미술프리즘’은 ‘족구장 프로젝트’, ‘빽빽이 들어찬 벌집촌에 예술적 상상력을 품다!’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밖의 대표적인 사례로 석수시장 프로젝트를 통해 결성된 ‘공화국리라’의 ‘동네예술가프로젝트’, ‘페포먼스 반지하’, ‘믹스라이스’, ‘플라잉시티’, 김강, 김윤화의 ‘오아시스프로젝트’, ‘야투’의 ‘예술과 마을’ 등을 찾을 수 있다.

8. ‘공공성의 확장’과 ‘뉴장르 플롭아트’ : 정부, 지자체의 뉴장르 공공미술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서서히 활성화되기 시작한 뉴장르 공공미술은 초창기 민간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정부, 지자체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화되었다.

2006년 문화관광부 주최,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한 ‘Art in City’<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은 자체 평가에서 공공미술의 인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용자 지향적인 공모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했으며 미술가들에게 창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미술 지원 사업 확산에 기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9년 ‘마을미술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아트인시티’와 ‘마을미술프로젝트’는 뉴장르 공공미술이 정부차원에서 대규모로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공공미술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로, 단기간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었던 경우는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김윤경)으로서의 공공미술을 실현하기에는 1년안에 기획, 공모, 선정, 진행, 평가를 완료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게다가 ‘참여와 과정, 공익’에 대한 ‘압박’은 ‘모여서 벽화를 그리는’ 수준을 되풀이하면서 결과적으로 “삶에 침투”하지 못하고, “관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과정”으로 대상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이나 ‘마을미술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통해 스스로 고백하듯이 자칫 공공미술을 활용한 ‘복지사업’이나 새마을운동식의 ‘환경미화사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정부, 지자체 주도의 뉴장르 공공미술이 많은 성과와 의미 있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공동체 속에 머무르고 살아남게 하”(앨런 카프로우)지 못하고 “90년대식 플롭아트”(마이크 키멜먼)로 재현되는 모습은 ‘지금-여기’ 공공미술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가 된 것 같다.